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다



민 경 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끈 민족사적 쾌거였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적대적 관계에서도 상호 설득과 이해를 통해 평화적 공존과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오래전부터 중단되었고, 그와 함께 현재 한반도에는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고 나아가 전쟁의 참혹한 그림자마저 엄습하고 있는듯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끈 민족사적 쾌거였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적대적 관계에서도 상호 설득과 이해를 통해 평화적 공존과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오래전부터 중단되었고, 그와 함께 현재 한반도에는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고 나아가 전쟁의 참혹한 그림자마저 엄습하고 있는듯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금강산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1998년 11월 닷이 오른 금강산관광은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안고 있었지만, 그 후 다양한 영역의 남북협력을 확대하는 견인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2008년 8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은 중단되게 된다.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면서 올해 4월 현 인택 전 통일부장관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자산 몰수·동결조치 철회, 3대조건 해결'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제시하면서 금강산관광 사업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남한정부에 대응하여 북한은 올해 5월 기존 '금강산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최근 금강산에 있는 남한 자산의 동결·몰수를 통해 남한투자자와의 재산관계 정리를 선언한 북한은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범관광을 실시하면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당국은 명확한 실효성도 담보하기 쉽지 않는 법적·외교적 조치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혹시 남한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 남북현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가. 이제 정부는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정책의 변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가장 잘못된 분야를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으로 지적하면서 '5·24조치의 철회'와 '선 교류협력, 후 사과'에 대해 반대 응답의 두 배 이상 압도적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수정하여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다.

우선, 국가는 금강산관광에 투자되어 몰수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한 여당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남측 피해는 이미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이산가족, 국군포로가족, 남북자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어 심각한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함께 조성된 남북관계의 악화로 대부분 고령자인 이들 가족은 상봉이 원천 봉쇄되거나 생전에 실현될 수 없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의 인권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셋째, 국민 생활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의 책무이다. 2008년 이래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형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남한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남북경협만이 국민 생활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의 유일한 대책이 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권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최근 외국인 대상 금강산 시범관광에서 중국의 참여는 향후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국에 의해 장악될 있다는 전조일 수도 있다. 금강산관광마저 중국의 주도아래 놓이게 된다면 황금평, 나선지대 등 북한의 대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향후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주권에 상당한 양보를 강요받을 수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면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심하여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결단과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유연성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내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야기된 남북관계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당국자회담을 시작으로 당면한 남북 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며, 이는 남북 모두 눈앞의 실적보다는 내실을 우선으로 하는 조용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때마침 최근 통일부장관 교체, 7대 종단대표 방북,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과 향후 정치적 방문의 지표명 등 남북관계 변화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어,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 시작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사람이란, 적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자라고 했거늘 동족간의 일시적 반목과 대립은 통일이라는 전체과정에서는 순간의 불협화음에 불과할 것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는가. **IFES·NK**